

한경훈 / 2월 / 도약 GS / 4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34342	20	13.9	16.5	11.5	61.9	1	4.00%	7	25
534807	20.4	14	15.5	11.5	61.4	2	8.00%	6	
529059	21	13.9	15.9	10.2	61	3	12.00%	7	
534241	21	13.1	16.7	9	59.8	4	16.00%	7	
529165	19	12.4	16.5	8	55.9	5	20.00%	5	
529402	19	16.5	13.5	6.2	55.2	6	24.00%	6	
529277	19	12	15.2	8	54.2	7	28.00%	5	
529237	19	11	12.8	10.5	53.3	8	32.00%	6	
534313	17.9	12.5	14.3	8.5	53.2	9	36.00%	6	
529016	20	13.1	13	7	53.1	10	40.00%	6	
534175	19.5	9.9	13.6	9	52	11	44.00%	6	
534391	16	12	15	9	52	11	44.00%	5	
534355	19.5	12.9	9.6	8.5	50.5	13	52.00%	5	
534201	19.5	10	12.3	7.7	49.5	14	56.00%	5	
534251	16	11.5	13.5	7.5	48.5	15	60.00%	6	
534165	18.9	11	11.2	7	48.1	16	64.00%	5	
534222	17	10	12.5	7.5	47	17	68.00%	5	
534426	18	10.5	11	7.5	47	17	68.00%	5	
534187	19	13.6	11.5	0	44.1	19	76.00%	5	
528964	15.5	7	13.5	7.5	43.5	20	80.00%	6	
534397	17.8	11.5	9	0	38.3	21	84.00%	4	
534230	12.5	12.1	11	2.5	38.1	22	88.00%	4	
534188	18	4	9.5	6.2	37.7	23	92.00%	5	
534163	18.5	8.4	8.3	0	35.2	24	96.00%	5	
528987	16	4.5	6.7	3.5	30.7	25	100.00%	4	

한경훈/2월/도약GS/4회/1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풍부한 사안포섭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20호 판단기준 키워드 누락 주의하셔야합니다.</p> <p>사안포섭 두껍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워드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p> <p>12호 후단에 대해서 권리자 판단기준은 20호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더 적어주셔야합니다.</p> <p>(2) 설문 2</p> <p>21호 명의자 상이한 경우에 대해서 “편의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서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라는 점을 살려주셔야합니다.</p> <p>유사판단시에 배점에 따라서 판례 기재해주세요</p> <p>3. 소결</p> <p>문는 바가 까다롭지 않았기에 많은 분이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다만 사안포섭 키워드 살리기 및 결론 맞추기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변별되기 때문에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사안포섭 두꺼운 경우에 목차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p>	

한경훈/2월/도약GS/4회/2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다들 잘 쓰셨으나 다각적 조치 기재 필요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34조 1항 7호 인용상표에 취소사유 있는 경우 기재 필요합니다.</p> <p>상품c에 대해서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거절결정확정시까지 심사보류 된 다거나 “거절결정확정후 “라고 적어주신 분들에게 높은 점수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34조3항 개정상표법 언급해주신 분들에게 추가배점했습니다.</p> <p>조치는 항상 다각적으로 기재해주시면 좋고, 목차별로 한두줄 정도 내용 채워주세요.</p> <p>3. 소결</p> <p>까다롭지 않았기에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조치 기재시에 조치1 ,2 이렇게 목차 매겨서 써주시면 더 인상 좋은 것 같습니다.</p> <p>글씨를 짧은 시간내에 고치기는 힘들기에, 글씨 고민이신 분들은 모음을 크게 쓴다거나 결론 부분이라도 정자로 쓰는 식으로 가독성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한경훈/2월/도약GS/4회/3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의 사실관계가 길지 않아 문제를 읽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p> <p>사안포섭보다는 판례와 조문을 올바르게 작성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상표권 공유의 법적성질 판례에 키워드를 잘 포함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p> <p>상표법상 취급의 경우 답안에 없더라도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추가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p> <p>(2) 설문 2</p> <p>124조 2항, 3항을 헛갈린 분이 계셨는데, 피청구인의 경우 2항에 해당함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p> <p>심결취소소송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문제점에서 심판청구와 같은 규정이 없음을 언급한 후에 판례를 작성한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설문 3</p> <p>목차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설문인 것 같습니다.</p> <p>모든 판례를 작성했더라도 논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진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p> <p>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주체적 요건을 누락한 답안이 다수 있었는데, 이를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p>	

3. 소결

문는 바가 까다롭지 않았기에 많은 분이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조문 병기나 판례 표시를 누락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작성을 해주셔야 답안 인상이 좋아집니다.

또한, 상표법에 있어서는 학설의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학설은 이름만 작성하거나 간단하게 쓰시는게 좋습니다.

한경훈/2월/도약GS/4회/4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문는 바가 명확했기 때문에 다들 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p> <p>다만, 마지막 문제였기에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분이 많았습니다. 시간 관리에 유의해 주세요.</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甲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언급한 분께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도형상표의 유사판단 판례를 누락한 답안이 다수 있었는데, 도형상표의 유사판단의 경우 메인 판례가 될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가 주세요.</p> <p>유사판단 일반원칙 판례, 이격적 관찰 판례를 작성한 경우에도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설문 3</p> <p>전용권 항변 가부에 대하여 누락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p> <p>乙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용권 범위내 사용할 경우 전용권 항변을 할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가 주세요.</p> <p>3. 소결</p> <p>까다롭지 않았기에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누락한 판례, 조문은 기본서에 표시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해 주세요.</p> <p>목차 옆에 적극, 소극, 적법 등을 작성할 경우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p>	

[문제-1]

12

I. 원문(1)

1. 거품이슈 및 큰기 기재이슈

(1) 심사관은 거품설정 전 미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고 (구해 55조 1항), 거품이슈와 큰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구해 55조 2항)

(2) 사안

乙클렌이 대해 구해 34조 1항 20호 및 12호의 거품이슈를 명시하고 그 큰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치한 바 심사관 통치의 적확성 및 법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2. 구해 34조 1항 20호 해당여부(각각)

(1) 의미, 취지

상표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자 아노라가 신의칙에 위반한 클렌의 등록을 불허하기 위해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행위를 하면서 유사행위의 상표를 클렌하는 경우 등록 불가하다.

(2) 선사용포장 권리와 판단 제131

선사용상표의 권리가 누구인지는 당사자 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내부관계, 선사용포장의 개판·선정 사용 정제, 상표 사용을 통제하거나 상표의 돌진을 관리한 자가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3) 4안

① 이 4건 계약 내용에 비추어 계약의 법적 성격은 위임 계약이고, ② 이 4건 계약에서 정한 제품생산 도강디자인, 판매, 출하 등이 임무의도권, 乙의 甲에 대한 물건 질사 통보의무 등에 따르면 상회의 4통은 동제라거나 물건을 관리한 권한은 甲이 가지고 있으며 ③ 'BANC'를 상품명으로 4통한 이 4건 비로는 모두 甲의 명의로 제3자에게 ④ 乙이 'BANC'의 명칭 개발 내지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여라도 'BANC'의 화제된 신종과 고객유인력은 甲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권리자는 甲이라 한 것이다. ⑤ 따라서 乙의 출원은 위임계약은 통해 甲이 'BANC'를 사용 또는 4통 준비금일을 앞둔시 이 4건 도강을 동일한 상품 '뚜기미로'에 출원한 것으로서 甲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였으므로 7항34조 1항 20호 해당한다.

구

3 7항34조 1항 12호 해당여부 (적극)

(1) 의의, 취지

숙모라 기본 열려가 있는 상품은 등록받을 수 없다. 기존 상품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숙모라의 출원 활동 방식을 위한다.



(2)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 여부 (적극)

1) '특정인' 의미 ~~부~~이

선4용상품 진리가는 출처인 이외의 타인이거나 한다.

2) 구체적인 내부관계 있는 경우 ~~부~~이

선4용상품의 진리가가 누구인지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구체적인 계약체결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품
4용을 독제하거나 상품을 풀리는 관리한 과가 있는 경우
그를 진리가로 보아야 한다.

3) 4인

乙이 이 사건 비로 제들의 도상이 이 사건 도상을
도시하고 제들·판매 광고를 하였으나 이는 위임
계약에 따른 사무 처리로서 비로는 모두 甲의
명의로 제로·판매된 이상 甲의 출처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甲의 출처로 인식된 'BANC'와 ^{동원}유사한 도상인
이 4건 도상을 동일한 상품 '유기비로'에 출원한
乙의 출처는 : ~~구~~출 34조 1항 12호에 해당한다.

4. 결론

①심4관의 통지는 전화적 위법사유가 보이지 않고

②乙 출원에는 ~~구~~출 34조 1항 20호와 12호의 실체적

거절이유가 존재하므로 거절이유 통지는 타당하다.

8

II. 실문(2)

1. 예상 거절이유 - 3항 34조 1항 2호

조약 당국 '중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거절이유가 존재하므로 3항 34조 1항 2호를 중실으로 검토한다.

2. 3항 34조 1항 2호 해당여부 (각각)

(1) 의미, 취지

파리협약 구성을 준수하고 공정한 국제권리 확립을 위해 조약당국이 등록된 상표의 유사성에 내의 출원을 일정 관계에 있는 자가 한 경우 등록 받을 수 없다.

(2) 출원인과 계약 명의인이 다른 경우 제13조

1) 계약의 체결 경위, 상표의 등록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출원인과 상표등록 명의자를 단리한 것이 본 규정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안

甲과 乙은 위 일제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본 회의 거절이유를 피하기 위해 丙 명의로 새로 설립하여 丙 명의로 출원한 것은 편의적·형식적인

것이 불과하므로 그와 丙은 실질적 동일인에 해당한다.

(3) 상표의 유사 여부 (특수)

1) 유사판단 원칙 제시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은 전체적·جز관적·이성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객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 혼동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2) 문과상표의 일반적 기재성질 제시

문과상표는 일반적으로 호칭의 유사여부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3) 사례

'BANC'와 'BONK'는 관념을 대비할 수 없고 외관은 언뜻 보기에는 상이해보일 수 있으나, 호칭이 '반크'와 '본크'로 매우 유사하여 청각이 극히 유사한 바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이다.

(4) 소결

- ① 甲은 조약당국인 '중국'에 상표를 등록받았고
- ② 甲과 乙은 특약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乙과 丙은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추정되고 ③ 'BANC'와 'BONK'는 상표가 서로 유사하여 ④ 상표는

‘유기비료’로 일컫는 바 丙의 출원인 34조 1항 2호에 해당한다.

3. 결론

丙의 출원인 34조 1항 2호로 기권된 것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문제-2]

I. 실문(1)

1. 부분기권결정 제도

(1) 이유

심사관은 출원이 34조 54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권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상품인복기 기권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품만 기권결정을 하여야 한다. (34조 54조 전단 및 후단)

(2) 취지

기존의 출원일체 원칙을 폐기하고 부분 기권 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 확대 및 편의를 위함이다.

2. 사안①- 상품 a, b

(1) 34조 1항 1호 이의, 취지



신등록 상품권사의 이익을 보려고 수요자의 클리클로
방지를 위해 타인의 신출원 등록상품의 유사방위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

(2) 소견

甲의 상품이 최소4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실질 특성 관계는 일용 목적한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乙이 출원한 상품 a, b는 3항 3항
항 3항에 해당하여 기권결정 내려질 것이다.

3. 4항 ② - 상품 C

상품 a 및 b 및 c는 모두 비유사 상품으로서
乙이 출원한 상품 A'는 甲의 상품 A와 유사
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이 비유사하여 기권결정되지
않고 a, b의 기권결정이 확정된 때 출원 기권결정
(3항 5항 3항) 및 등록결정 (3항 6항) 된 것이다.

II. 결론(2)

B.4

1. 甲 출원 기권이유 - 3항 3항 3항

(1) 이익, 취지

최소실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권과
등은 4호 제의 최소실용 청구 후 일정 기간 내
이와 유사방위의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다.

(2) 취소심판 청구 후 심결 확정 전 적용여부

개청 상토법에서 34조 3항의 판단시점을
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심결 확정일 즉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등록 불가한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심결 확정 전이라도 취소심판 청구 후라면 보로가
적용된다.

(3) 4만

그런 甲 상토에 대해 라신이 출원한 날인 2025.
3.15 이전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2025.6.30
인용심결 확정되었는 바, 甲이 심결 확정 전인
2025.6.10 출원했다 하더라도 34조 3항에
해당한다.

2. 乙 출원 거절이유 - 35조

(1) 이익, 취지

중복 등록을 배제하고 수요자 혼동 방지를 위해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최신 출원인만이
상토를 등록받을 수 있다.

(2) 4만

甲의 출원이 아직 계속 중인 상황에서는 선출원의
위위가 유지되므로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乙의
출원상토 중 'b'에 대해 35조의 거절이유가

예상된다.

3. 乙의 등록 조치

(1) 조치 ① - 정보제공 (조치 49조)

乙은 甲의 출원이 조항 34조 3항에 대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하여 등록을 드로할 수 있다.

(2) 조치 ② - 이의신청 (조항 60조)

乙은 출원공고 후 2개월 이내에 甲 출원이 조항 34조 3항에 대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조치 ③ - 공초동의서 제출

甲으로부터 공초 동의 허락을 받는 경우 유사방위 상표 A'를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조치 ④ - 심사권자중지신청 (조항 70조 1항)

乙의 과실 출원에 대해 심사권자중지신청을 통해 등록여부결정 시 이전에 甲 출원을 소멸시켜 등록을 드로할 수 있다.

(5) 조치 ⑤ - 포기, 취하, 양도

乙은 甲 출원에 과실이 있음은 이유로 甲에게 포기 또는 취하 또는 과실에게 양도할 것은 전유래보 수도 있다.

[문제-3]

I. 식문(1)

7.0

1. 상토전 공유의 의미

2인 이상이 하나의 상토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유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상토전 공유를 합유로 볼지 공유로 볼지 상토법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문제된다.

(2) 사례

① 상토전 공유는 목적재산권의 특수성으로 인해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일 뿐 ② 일반적 으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토전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 ③ 상토전 공유를 합유관세로 볼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④ 상토법의 다른 규정이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상 공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 결론

민법. 규정 - (준공동소유)에 따라 상토전 공유에도 민법상 공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볼 수 있다.



3. 상표법상 취급

(1) 원칙

① 상표권도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② 공유투 1인인
과유롭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③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도 과유롭게 할 수 있으며 ④ 공유투를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2) 다른규정이 반하는 경우

1) 처분행위의 제한

주요 92조 2항에 따라 다른 공유투 모두의 동의
없이는 지분 양도 및 지분 목적의 설정·변경이
불가능하다.

2) 수익행위의 제한

~~다~~ 주요 92조 3항에 따라 다른 공유투 모두의
동의 없이로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신탁청구의 제한

공유투 상표권에 대한 신탁은 공유투 모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 (주요 124조 2항, 3항)

(3) 본권에 반하는 경우

상표권의 목적재산권의 특수성에 따른 본권에 반하는
양도·양보 등의 행위는 제한된다.

(4) 소극적 효과

① 침해금지 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공유투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② 상대방청구는 4인
의 공유 지분 1명씩 내어서 가능하다.

II. 실권(2)

3.5

1. 실권 청구의 적법 여부 (적극)

(1) 2항 124조 2항

공유 상표권이 대한 실권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2) 4항

A, B는 상품 X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로서
상품 X에 대해 실권을 청구한 경우 A, B를 전원으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적법하다.

2. A가 단독으로 소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1) 문제점

실권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실권전환에 대한 고유
필수적 공동실권을 규정한 2항 124조 같은 규정이
없어 실권취소소송의 형태가 문제된다. (제131)

(2) 공유자 1인의 원고적격 제131

① 공유자 1인이 실권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취소판결의 효력은 공유자 전원에게 비치고 ③ 패소
했다 하더라도 기존 실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다른 공

유사 권리가 영향이 없으며 ③ 공유자 중 1인이
소제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실적이 그대로
확정되어 재산권에 부담한 결과를 받게 되므로
실적취소소송의 제기를 보충행위로 보아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소인

A는 B의 동의나 B와 함께 실적취소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적이 불복
하여 특허법원에 위법한 실적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II. 실용(3)

6.0

1.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의미, 취지

상표권은 실용등록 후 10년 동안 존속한다. (특83조
1항), 단,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은 최대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2.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법적성질 제1절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이제 새로운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자와 지점상들의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존속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3 A, B가 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취급-반려

(1) 당사와 야빈과에 대한 심결 효력 제131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내려진 심결은
그 효력이 없다.

(2) 부적법한 소멸등록 효력 제131

상표권의 등록은 발생 요건이지 존속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되어도 상표권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존속기간도 그대로 진행한다.

(3) 회복등록의 효력 제131

부적법하게 소멸된 상표권에 대해 회복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등록은 부적법한 발소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복등록이 되어도 존속기간에는
영향이 없다.

(4) 사안

① 상표권에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존속
기간은 획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② A, B의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인 2025. 1.
2까지인바 등록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사이에
D를 상대로 내려진 부적법한 심결과 소멸등록이
있었더라도 존속기간에는 영향이 없고, ③ 회복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A, B가 2025. 1. 12 특허청이
회복등록과 갱신등록을 신청한 것은 ~~등록원료부터~~
존속기간 만료후 6개월이 지난 것으로서 시기적
요건에 위반되어 (특 84조 2항 단서) **반려**
것이다.

[문제-4]

I. 설문(1)

4.5

1.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 (특 91조)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칭상표에 사용권 권리를
독점한다. 사안에서 2은 독점권을 가진다.

2. 2의 사용 거부 - 적극적 효력의 제한

(1) 특 92조 1항 의미, 취지

타법 간 선출원원칙을 사후적으로 조항하기 위해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발생 지각권과 지속되는 경우
그 타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2) 사안

2은 1의 선발생 지각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2차원 개략도를 등록받았으나 이는
1과의 관계에서 서로 지속되어 2의 상표의 독립적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2은 '2개각도'를

'인형'에 사용될 수 없다.

3. 乙의 사용금지 가복 (각각)

(1) 사용금지권 제한 여부 판례

저작권과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등록상표를 정당원원 없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2) 4단

乙은 저작권과 甲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 丙이 '2 캐릭터'와 유사한 형태로 인형을 제로 하고 있는 경우 선저작권의 저촉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상표권에 기해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II. 실문(2)

3.5

1. 법 34조 1항 7호 의미, 취지

선등록상표권과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요자의 출처 혼동 방지를 위해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 범위 내의 출원은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2. 상표 유사 여부 (각각)

(1) 도형상표 유사 판단 판례

도형상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 하여 동일·유사 상표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출처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유사한단한다.

(2) 지적적 관측 제1회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봤을 때 수요자가 출처활동은 일으키는 경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4인

'乙 캐릭터'와 '甲 캐릭터'는 외관이 극히 외배각 인상이 동일하여 동일한 상품 '인형'에 속하는 경우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본 수요자의 입상에서 출처활동의 열려를 일으키는 유사한 상품라고 할 수 있다.

3. 동기의 타당여부

'甲 캐릭터'는 '乙 캐릭터'와 유사하고, 상품은 '인형'으로 동일하므로 甲 클라이언트에 대해 34조 1항 1호의 위권이유 동기를 한 것은 타당하다.

II. 설문(3)

3.5

1. 丙이 지어 - 전용사용권과

(1) 전용사용권 의미, 법적성질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독점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3조 95조)

(2) 권리 발생요건

전용사용권의 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이 불충족하고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3항 100조 1항)

(3) 사안

ㄱ은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ㄴ과의 설정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ㄱ의 지위는 전용사용권자로서 'ㄴ 캐릭터를 '유통권
행사자'에 사용할 권리를 득권한다.

2. ㄱ의 ㄴ에 대한 권리금의 가부 (적극)

(1) '제3자의 이익 제1항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란
그 등록의 효력을 극대화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에 한하고,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안

ㄱ은 ㄱ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ㄱ의 전용사용권 등록의 효력을 극대화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ㄱ은 자신의 전용사용권
에 기하여 ㄴ에게 권리행위를 금지
시킬 수 있다.

<문-1>

I. 설문 (1)

1. 법342 1항 20호 해당 여부-적극

(1) 의의. 취지

특정인과 신의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 변론 위해 그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 시 등록받을 수 없다.

(2) 신의관계 결부-적극

1) 실질적 권리자 판단 취지

여러 당사자들 사이 실질적 권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 내부 관계, 계약의 성질 및 내용, 전사물·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실질적으로 상품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관리해온 자가 누구인지 등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안

①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위임 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비료의 명칭 선정 행사에서 乙이 참여는 했으나 이는 甲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점, 甲이 2020년경 이 사건 공장을 증축하고 2020.9.24 방도군수에게 비료 생산업 등록을 마친 점, ③ 이 사건 비료는 모두 甲 명의로 제조·판매된 점, ④ 이 사건 공장 사용 통제하거나 이 사건 비료의 품질을 관리할 권한은 甲이 가지는

점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표장의 권리자는 甲에 해당한다. 결국 2은 甲과의 이 사건 계약은 통해 신의관계를 형성한 바 본 요건 충족된다.

(3) 사용 또는 사용 준비중 - 제국

甲은 2019.4경 사업을 하기로 하여 그 이후 2020.12.19 비료 신고 등을 통해 ~~회사명~~ 'BANC'를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본 요건 충족한다.

(4) 상품 유사 여부 - 제국

이 사건 표장은 甲이 사용한 표장과 동일하므로 본 요건도 충족한다.

(5) 상품 유사 여부 - 제국

2 출원 상품 상품과 甲 사용 상품 모두 유기비료로 동일하다.

(6) 손해

2 출원에는 3421호 20호 거절이유 존재한다.

2.

2. 3421호 12호 여부 - 제국

(1) 의의. 취지

수요자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출제활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 영려 있는 상품 등록 불가하다.

(2) 출제활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 요건 충족

출처출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 염려 있는 상품은 일단
출동대상상품이 국내 직어도 특징인 출처 표시로 인식
되어야 하고, 동일·유사한 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품
에 출처될 경우인 것을 요한다.

(3) 권리자 판단방법 쉼시회

선사용상품의 권리자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
내부 관계, 실제로 상품의 사용은 통제하고 상품 품질은
관리해 통제가 누구인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야 한다.

(4) 사안

이 사건 판장은 특징인 환자로 인식되고, 이는 2이 甲의
위임 사무처를 한 해위로서 모두 甲 명의로 제품을 판
매·광고 할바 이 사건 판장의 실질적 권리자는 甲에
해당한다. 2은 甲의 사용 판장과 동일한 상품을 등
말한 상품인 유기비준에 출처할바 볼 거침이유 결재
한다.

3. 결론 - 통지 타당

(1) 거절이유통지 - 45522장

심사관은 거절이유통지 시 지적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2) 사안



1) 절차적 타당성 - 정답

출원인 2의 제1항을 침해한 사실 보이지 않아 타당하다.

2) 실체적 타당성 - 정답

앞서 살펴본바 34항 1항 2항, 12항 제1항이유 존재하므로 제1항이유 명시하고 근거 국외에서 기재해본바, 타당하다.

3) 소결

심사관 제1항이유를 지 실체적, 절차적 타당하다.

II. 설문 (2)

8.4

1.쟁점정리

甲 상품이 국내 등록 및 인식도 취득한 사실 보이지 않으므로 34항 1항 2항 문제된다.

2. 항 34항 1항 2항 의의 취지

파리협약 제6조의1에 보면 규정으로 조약 당사국 등록 상품과 동일·유사 상품은 신의과하게 있는 자가 권리자 등의 없이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한 경우 등록받을 수 있다.

3. 신의 관계 구축 - 정답



(1) 명의로 상이한 경우 취지

원칙적으로 신의관계 있는 자와 친연인 상이한 경우 볼 수 없음
 그러나, 볼 규정의 취지를 위해 편의적 형식적
 으로 제3자가 친연한 경우 실질적으로 두 주
 체를 동일인으로 보아 볼 수 인정될 수 있다.

(2) 사안

2은 볼 거절이유를 회피하기 위해 丙 법원 설립 후 丙
 명의로 친연한 바 2과 丙은 볼 수 인정시 실질적으로
 2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甲과 丙 사이 신
 의관계 인정된다.

4. 상표 유사 여부 - 적극

(1) 일반 원칙 취지

양 상표 유사 판단시 인과·형·관념 전체적·개괄적·이
 정적으로 관찰하여 시장상 거래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 기준으로 실제 혼동 여려 있는 경우 양
 상표 유사하다.

(2) 문자 상표 관련 취지

문자 상표의 경우 형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
 이 강하게 인식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사안

① 양 상표의 관념은 모두 2018년 12월 14일

광은 글씨체나 두번째 알파벳 A 와 O 이시 차이가 있으나, ③가장 중요한 한글을 비교해볼면
甲 상품은 '분크' 내지 '붕크', 丙 상품은 '반크' 내지 '방크' 라는 첫번째 음절 중상 차이 이외 지체적 차이가 유사하다. 이같이 이러한 한글의 유사성을 압도한 정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 상품 유사하다.

5. 기타 요건

甲의 상품은 계약당사국인 중국에서 등록받은 상품이고, 甲 지명상품과 丙 지명상품 모두 유기비료로서 동일하므로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한다.

6. 결결 - 등록 불가

丙 상품출원시기는 34년 1월 2일 제척이유 존재하므로 등록 불가하다.

(제척)

못 !!

<문-2>

I. 설문 (1)

1. 法342 1항 1호 기각이유 ~~각~~ ^{제1항}

(1) 의의. 취지

~~등록상~~ ~~신출원~~ 등록상표 보호 및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신출원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 동일·유사 상표 출
 원시 등록 불가하다.

(2) 인용상표 취지사유 있는 경우 취지제

인용상표에 취지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취지심판 등
 으로 취지심결 등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용상표로서 대
 상징표 인정된다.

(3) 사안

~~국 출원~~ ~~상표~~ 甲은 상품 b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취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취지심판 심판
 확정 전이므로 인용 대상징표 있고 그 출원 상표
 는 甲 상품과 유사하고 상품 a, b는 동일하므로
 상품 a, b에 대해 기각이유 존재한다.

2. 심사관 결정

(1) ~~불합격판결제도~~ - 法542 후단

~~출원인~~ 편의를 위한 제도로써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기각이유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 해야한다.

(2) 사안

앞서 살펴볼 바 2 출원 상품 a, b에 대한 342/387호
거절이유 있으므로 심사관은 상품 a, b에 대해서만
거절결정해야 한다.

II. 설문 (2)

2. X

1. 甲 예상 거절이유 - 342/387호

(1) 의의. 취지

최소심판 결정은 위해, 최소심판 청구일 이후 상품
등록 소관. 최소심판 확정 등 된 경우 해당일 이후 3년
간 동일·유사 상품을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없다.

(2) 최소심판 청구 후 확정지 출원

개정법 도입으로 최소심판 청구 후 심결 확정 전 출원
에 대해서도 342/387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
였다.

(3) 사안

甲은 최소심판 청구 후 심결 확정 지인 2025.6.10
동일한 상품을 동일 상품에 출원했고, 2025.6.30
최소심판 인용심결 확정될 때 342/387 거절이유 존재
한다.

2. 2 예상 거절이유 - 35조 1항

(1) 의의, 취지

중복 권리 발생 방지를 위해 출원된 동일·유사 상품과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시 후출원 등록불가하다.

(2) 사안

甲 출원 계속 중인 상태이시 2은 유사한 상품 A'은
~~유사한~~ ~~상~~ 동일한 상품 B에 출원한 바 35조 1항 거
절이유 존재한다. 상품 B에만

3. 2 조치

(1) 이의신청, 정보제공

1) 의의, 취지 - 60조 49조

심사에 광중 참여 도모 위해 누든지 기간 내 거절이유
존재를 알릴 수 있다.

2) 사안

甲 출원 34조 3항 거절이유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신청, 정보제공하여 2 출원 등록 도모할 수 있다.

(2) 광중동의서 제출

1) 의의, 취지 - 35조 6항

거래실태 반영 및 출원인 불편 해소 위해 유사 범위
내 출원시 광중동의 받아 등록 가능하다.

2) 사안

2은 출원자 甲으로 부터 유사범위 항목등의 발
아 등록 도모할 수 있다.

(3) 출원 포기. 취하. 양도 청구

342 3항 개시내용 출제하므로 출원 취하. 포기. 양도
청구할 수 있다.

(4) 심사청구 중지요청 - 102/항

이의신청. 정보제공 이후 자신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
중지요청 할 수 있다.

(5) 출원 분할. 색지보제

1) 의의. 취지 - 45항

출원인 편의를 위해, 일련 상품에 대해 분할하여 출
원일 심사시켜주는 제도이다.

2) 사안

개시내용 없는 상품 C의 빠른 등록을 위해 상품
B를 분할하고 출원인에서 색지보제하여 상품
C의 빠른 등록 도모할 수 있다.

13.9. <결>

<문-3>

I. 설문 (1) 5.0

1. 상표권 공유 의미

상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표권 공유 성질 체계

상표권의 지분양도 제한, 질권설정 제한 규칙 등은 상표권 공유의 합유권 성질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상표권의 무체재산권 특수성이기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상표법 형문 규정이 배타적이나 불질에 배타적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공유에도 민법 공유 관련 규칙 적용될 수 있다.

3. 검토

상표권도 재산권의 하나로서 볼 수 있는 바, 민법에서 공유에 관한 규칙 적용될 수 있다.

4. 상표법상 취급

(1) 원칙

- ① 상표권 공유자는 단독으로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② 공유 상표권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존속기간갱신

청구할 수 있다.

(2) 예외 - 규정에 반하는 경우

전문 변칙에
주지

1) 처분행위 제한

상표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자신의 지분 양도나 지분에 대해 질권 설정할 수 있다.

2) 수익행위 제한

상표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전용사용권이나 허락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심판청구 제한

공유상표권에 대해 심판청구시 공유자 모두를 심판의 피청구인·청구인으로 청구해야 한다.

(3) 예외 - 불질에 반하는 경우

상표권의 불질에 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상표권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는 없다.

II. 설문 (2)

3.7

1. 전문 심판 청구 - 제법

(1) 관련 규정 - 124조 2항

공유 상표권자에 대해 심판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청구해야 한다.

(2) 사안

공유 상표디자인 A.B 모두를 상대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적법하다.

2. 단독 심결치소소송 가복-적극

(1) 심결치소소송 의의. 취지- 162조

심결 등에 대해 심판 당사자 등은 특허법원에 심결치
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

(2) 단독 심결치소소송 가복 취지

상표법에 공유자의 단독 심결치소소송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명문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 단독 심결치소소송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심판
원에서 당사자 모두에 대한 절차가 다시 진
행되고, 패소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결과 한일하지 아니에
반해 볼 수 있다. 공유자 일부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부담하는 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것은
재산권의 부담해침이다. 따라서 공유자 일인 단독
심결치소소송 가능하다.

(3) 결론

공유자에게 공동소송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사
필요 공동소송으로 보는 취지에 타당하다.

(4) 사안

부리한 심결을 받은 공유자 중 일인인 A는 단독으로
B의 동의 없이도 특허법원에 심결추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II. 실문 (3)

7.2

상징

1. 결속기간갱신등록신청 의의. 취지 - 832287

저장상품 방지 및 상품의 신용 보호를 위해 상품권 결속
기간 10년씩 갱신 가능하다. 갱신신청은 새로운 상품권 받
게 아니라 동일한 유자하면서 결속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다. (실례)

2. 요건 및 위반시 취급

(1) 요건

상품권자나 제당 승계인이 ~~결속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2) 위반 시

즉체망. 시기상 요건 불합시 반려된다.

3. A, B 갱신신청 취급 - 반려

(1) 결속기간 중반 여부 - 2급

1) 심결의 효력 관련 쟁치

청구인 지점이 인정되지 않는자를 상대로 한 심
결은 청구인 지점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그 심결

허락이 미치지 않는다.

2) 결속기간 중단 여부 원칙

특수 상표권의 등록은 상표권 결속요건이 아니므로 부
적법한 심결로 인해 상표권 소멸등록된 경우라 한하
라도 결속기간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결속기간 그대로 진행한다.

3) 사안

인용심결을 청구한 자는 없는 D에 대해 내려진 것으로
A.B에게 허락이 없고, 부적법한 소멸 등록의 경우에
는 A.B 공유 상표권 결속기간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A.B 공유 상표권 결속기간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2) 결속기간 다시 진행 여부 - 2급

1) 허복등록 허락 원칙

부적법한 상표권 소멸등록에 대해 다시 허복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멸등록을 처음부터 없었
던 것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복등록은 통
해 결속기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중단된
결속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안

특허청장의 허복등록은 부적법한 소멸등록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복등록으로 인

해 A.B 양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다시 진행하
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A.B의 상표권은 2015.1.2 등록에 따라 그 존속기
간이 2025.1.2까지 이다. 따라서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을 2024.1.2부터 2025.1.2 사이에 해야
한다. 사실인시 A.B는 2025.1.12에 갱신등록
신청한 바 시기에 요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A.B
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을 반려되어야 한다.

기판정함다

<문>

<문제-4>

I. 설문 (1)

4.2

1. 2 사용 개박 - 2주

(1) 상표권 행사 - 법 89조2

등록상표권자는 지칭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
각은 독점한다.

(2) 저촉되는 경우 - 법 92조1항

선발생 저작권 등과의 조화를 위해, 출원일 전에 발생
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작권자
동의 없이 등록상표 사용한 수 없다.

(3) 사안

2의 상표 등록에도 불구하고 2의 출원일인 2024.2.2 이전에 이미 2022년경 甲의 甲 캐릭터에 대해 지각권 발생했다. 甲 캐릭터와 2 캐릭터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 처지간 지속관계 인정된다. 따라서 2은 甲의 등의 없이는 2 캐릭터를 인형에 사용 할 수 없다.

2. 제3자 사용금지청구 가부-정규

(1) 사용금지청구 가부 취지

지각권 등과의 지속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사용금지청구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안

甲과 2가 지속된다해도 甲과 관련 없는 제3자 丙이 2 허락 없이 2 캐릭터 유사 형태로 인형 제작하는 것은 2 상표권 침해이므로 2은 丙에게 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II. 설문 (2)

2.5

1. 조3421항 전의의 취지



선출된 등록상표 또는 문·수표자 등록 방지권 위해 선출된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시
등록 불가하다.

2. 상표 유사 여부 - 기준

(1) 일반 원칙 취지

양 상표 유사 판단시 이관·청·관념은 전체적·개괄적·
이점적으로 관찰하여 지평상품 거래계에서 일반 수
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참치 원인·결론
영역에 있으며 양 상표 유사하다.

(2) 동형 상표 취지

양 상표의 이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한 경우
양상표 유사하다.

(3) 사안

두 상표 모두 동형상표로서 이관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일련의 위치나 팔다리의 위치 등에서 세부적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이점적 관찰시 파악하기
힘들 차이로 보이고 양상표 이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양상표 유사하다

3. 결론

지정상품은 모두 인형으로서 동일하므로 거액이유 342
항 1항 존재하므로 해당 통지 타당하다.

Ⅲ. 결론 (3)

3.5

1.쟁쟁쟁쟁

전용사용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바 丙은 전용사용권자에게 해당하고, 2은 甲 상품
과 유사한 상품을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바
2의 전용권 항변 및 丙의 전용사용권 대해 가복
문제된다.

2. 2 전용권 항변 가복-2구

(1) 전용권-892

지정 상품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품사용권
권을 득정한다.

(2) 지정상품 범위 위시제

지정상품은 거래사실 형평성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
는 것을 포함한다.

(3) 사안

2은 2개략어를 인형에 대해 등록받고 그 이후
인형과 거래사실 형평성 동일하다 보수 없는,
비유사 상품인 플래폰 애시시에 사용했으므로 등

특정인의 지용권 범위 사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3. 丙 대항 가복 - 237

(1) 제3자 대항 효력 - 1002 1항

지용사용권 이등록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제3자 의미 배제

제3자란 등록 효력 주장이 정당한 이익 가지는 자로서 침해자는 제3자로 볼 수 없다.

(3) 사안

침해자인 Z은 1052 1항 제3자 아니므로 丙은 지용사용권을 Z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결론

丙은 Z 침해행위 금지시킬 수 있다



<이 하 여 행>